

#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

[정현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6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4.

발 의 자 : 정현미, 한근수, 이정애,  
박은경, 원주영, 손정자,  
박윤옥, 김동훈, 감지현(민)

## 1. 제안 이유

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지속·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개인정보 보호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## 5. 관련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##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개인정보”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개인정보 보호 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
2.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, 지원 기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「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」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 비용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판단됨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○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
※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예산(2023년 ~ 2025년)

(단위:천원)

(세부사업)개인정보 보호업무 운영	2025년	2024년	2023년
01사무관리비	11,200	9,200	9,200
○개인정보보호·정보보안 교육 운영	5,000	5,000	5,000
○개인정보보호 홍보	6,200	4,200	4,200

○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전이므로 사전 비용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

## ☑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  -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-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-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(이하 “가명정보”라 한다)
- 1의2. “가명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, 오용·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·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.